대한민국 청와대

보 도 자 료

국가안보실, <해킹 2차 피해 근본적 방지> 점검

-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등 금융 관계기관 긴급소집 -

국가안보실은 11월 26일(목)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송기호 안보 3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을 긴급 소집해 기술적·정책적 방안 등을 점검했다.

최근 한전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금융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에 책임감 있는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등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무단 조회·이체를 예방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유출된 계좌나 카드 정보를 신속히 등록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참석 기관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 손실이 없도록 OTP 등 2차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